

‘올림픽 데이런’ 성공 개최 위한 현장 답사

전주시·전북자치도·대한체육회, 주요 후보지 방문…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전주시 하반기 개최 예정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인 전주에서 올림픽 정신을 기념하는 스포츠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올림픽 데이런 2025(Olympic Day Run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시청과 전북도청,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행사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답사는 올림픽 데이런의 핵심 행사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개최지 결정에 앞서 각 장소의 접근성

과 인지도, 공간 활용 가능성 및 상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현장 답사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올림픽 데이런 관련 회의 등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올림픽 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IOC 인증행사로서, 올림픽 정신을 기념하고 대중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일반 참가자 5~6000명을 대상으로 한 마라톤(5K, 10K)을 비롯

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 서울에서 열려온 올림픽 데이런은 올해의 경우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인 전주에서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를 스포츠 문화도시로서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북도, 대한체육회와 행사 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방

안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등 올림픽 데이런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림픽 데이런 2025는 전주의 스포츠 산업 육성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최적의 행사 장소를 선정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성공적인 이벤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바우처 택시’ 도입

전주시설공단,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해 7월부터 50대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전주시설공단은 7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다 풀이 배정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용 요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전용 콜택시 ‘이지콜’과 동일하다. 기본 요금(2km 이내) 700원에 1km당 100원이 가산되며 최대 2000원까지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택시요금에서 이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은 공단이 보조한다. 운영 구역은 전주시 일원에 한하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전주 지역이어야 한다. 바우처 택시의 운행으로 휠체어 교통약자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가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특장차량

분산돼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콜 대기시간 감소로 교통약자 이용객들의 애로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는 바람이다. 공단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콜 장비 사용 요령 숙지 등을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차량 증차 등으로 꾸준히 배차시간을 단축해 온 가운데 바우처 택시의 도입이 ‘이지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국 벤치마킹 이어져

타 지자체 관계자들, 전주 찾아

전주시가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를 배우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경남 거창군과 경남도청, 충남도청 등 타 지자체 관계자들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먼저 거창군청과 경남도청, 거창군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8명은 20일 전주시를 찾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학습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자립주택을 직접 견학하고, 자립대상자와의 만남과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자립대상자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자립지원 모델



전주시가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를 배우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어 21일에는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전주를 찾아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로써 전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5개 지자체와 10개 수행기관이 전주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타 지자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주시의 성공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핵심으로 운영되며, 시는 현재 27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해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총 32명의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있다. 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타 지자체가 전주시의 자립지원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자립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하게 정착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노인 의료돌봄 지원 강화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 통합지원회의 개최

전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주거 분야 전문가와 시·동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맞춤형 의료돌봄 지원을 위한 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시 통합지원회의는 34개 동에서 동 단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심의 대상자 의뢰된 돌봄 필요 노인에게 자력승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는 회의로,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돌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월 2회씩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매달 평균 60여 명의 노인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뇌경색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거동 불편으로 살던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급성기 질환

으로 수술 후 퇴원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노인 등 31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외상 또는 하지마비로 동네 병원조차 이용이 불편하거나 뇌경색, 고혈압 등 고위험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요양전망 안에서 방문치료 연계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 및 영양결핍 노인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연계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조치했다. 또 고관절 수술 후 거동 불편 노인에게는 안전바와 미끄럼방지매트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기로 하는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 총 55여 건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의료, 주거, 영양 등 분야 간 협력을 더욱 촘촘히 하고, 동 단위 사례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빙상경기장 7월부터 재개장

전주빙상경기장이 최적의 빙질 상태로 휴장 4개월 만에 다시 이용객을 맞이한다. 2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빙상경기장은 냉동시스템 개선 공사를 마치고 7월 1일 재개장한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빙상경기장 냉동시스템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업비가 1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이다. 냉동기와 냉각탑 등 냉동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시설 보수와 대여설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2010년 설치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오래된 냉동시스템을 새것으로 교체해 최적의 빙질 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냉동시스템의 탁월한 성능으로 유지비용도 절감돼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의 기반도 마련됐다. 공단은 공사로 인한 휴장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냉동기를 활용해 지하 링크장을 공사 직후부터 운영해 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5개 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 주관한 2025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5개 도서관이 선정됐다. 이들 2개 공모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을 가까이 접하고 공공도서관 등에서 인문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확산하며,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는 완산도서관과 송천도서관, 금암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선정됐으며, ‘지혜학교’ 공모사업에는 서신도서관과 평화도서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5개 시립도서관에는 각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서관에서보다 풍부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써 많은 시민이 인문학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